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: 마이다스 신성장기업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3년 11월 7일

3. 정정사항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 정보 등 주요 수치 업데이트	정기갱신	-	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(운용현황 및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)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(기타 비용, 총 보수·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, 동종유형 총보수)</p> <p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. 재무정보</p> 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 <p>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법 개정사항 반영	<p>투자자 유의사항</p> <p>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	<p>투자자 유의사항</p> <p>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
제 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기갱신	<신설>	<p>변경시행일: 2023-11-07</p> <p>변경사항: 정기갱신, 기업공시서식 및 법 개정사항 반영</p>
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※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	※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증권의 대여(주1) 증권의 차입(주2)

			<p>(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.</p> <p>가)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p> <p>나)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 <p>(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법 개정사항 반영	<p>다. 기타투자위험 〈신설〉</p> <p>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	<p>다. 기타투자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,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정기갱신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22.58% 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,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8.12% 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,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</p>
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<p>나. 과세 (1) ~ (2) 생략</p> 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·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류</p>	<p>나. 과세 (1) ~ (2) 현행과 동일</p> 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·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일반법인 15.4%(법인세 14%, 법인지방소득세 1.4%)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류</p>

		<p>종류C-P1, C-Pe1, S-P 수익증권 가입자) <별첨1> 참조</p> <p>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류 C-P2, C-Pe2 수익증권 가입자)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<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불입액 한도와는 별도로, 연 300만 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추가 세액공제됩니다.>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 <p>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</p> 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</p>	<p>종류C-P1, C-Pe1, S-P 수익증권 가입자) <별첨1> 참조</p> <p>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(종류 C-P2, C-Pe2 수익증권 가입자)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① 세액공제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. - 단,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. -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p> <p>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</p> 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‘연금세제안내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(삭제)</p>
제3부 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<신설>	가. 요약재무정보 (주 2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(13기, 12기, 11기 모두 해당없음) (주 3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

			<p>등이 포함(13기, 12기, 11기 모두 해당없음)</p> <p>[자산유형별 거래비용] 2023.09.15 기준</p> <p>[주식의 매매회전율] 2023.09.15 기준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	대주주 변경	<p>가. 회사개요 [주요주주현황] 현희현 (10%), 이재관(10%) 등</p>	<p>가. 회사개요 [주요주주현황] 현희현(10%), 이지혜(특수관계인 포함) (10%) 등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. 집합투자재산 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 업자)	법 개정사항 반영	<p>나. 주요업무 (2)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(의무)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 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</p>	<p>나. 주요업무 (2)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(의무)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 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집합투자재 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/관리 중인 집합투자 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 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<p>▶ 임의해지 (생략) 3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)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▶ 임의해지 (현행과 동일) 3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)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 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 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시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 등	<p>나. 수시공시 (2)수시공시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 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 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나. 수시공시 (2)수시공시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3 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의 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

〈별첨 1〉 정정 전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소득공제	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	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<별첨1> 정정 후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- 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-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.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) -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중 선택가능 (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%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